

ISSUE & FOCUS

Newsletter 2017-6(1)

J노믹스 일자리 정책 바로보기

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정책위원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들어가며

문재인 행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하였다. 관련 추경예산 11조원을 취임 9일 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22일에는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문재인 행정부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에서 가능하다. 경제성장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는 관련부처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하다. 기재부는 문재인 행정부 출범 10일 만에 내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두도록 요구했다. 기존 세출예산의 화석화 속에서 재정구조 개혁 없이 일자리 창출편성이 가능할까? 재정과제 중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이 따르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의 일자리정책

선거기간 중 발표한 공약과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살펴보면 문재인 행정부는 일자리 정부와 일자리 대통령을 국정중심에 놓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집무실에까지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은 것은 강력한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이다. 임금노동자 1/3규모인 비정규직을 축소함과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분야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적극육성책을 펴고 그 수단으로 금융, 세제, 공공조달,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자리 환경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취약계층인 여성인력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차별금지 추진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여성비율 확대,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계획도 갖고 있다. 신중년 정책, 즉 5060을 위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인생이모작(제2노동시장진입),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일자리 예산

2017년 예산규모는 12개 분야 약 401조 원이다. 이중 고용·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7조원, 교육 분야의 인력공급부문 교육경쟁력을 위한 예산 17조 원으로 25개 부처 18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예산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R&D예산은 GDP대비 5%이상으로 세계 1위, 절대액은 800억 불 이상으로 세계 5위지만 40%가 피인용이 전무하고 미래유망원천기술(6,200억원)중 55%가 피인용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17, 정해방). 이렇듯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미국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미국에 약 4,100명, 영국에 약 480명, 일본과 독일은 각각 약 260명이 있지만 한국은 4명에 불과하다(2017, 송희연). 제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기술변화에 서있는 지금 대학은 교육변화로 대응해야 하는데, 기술변화>교육변화 하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직무에 구조적실업(Skill Mismatch)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 한계와 과제

자본주의 4.0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사회구성원의 내생문제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경제 과제를 공공재로써 ‘수학적 모형보다는 가치 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시장 일자리 과제는 아베 총리가 실질금리 제로의 금융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해 제조업 등 기업부문의 실물경제 투자를 뒷받침하여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데 상당한 일자리 효과를 본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문재인 행정부 11조원 추경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자리 추경이 성공하려면 정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투자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유념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기간/단계별로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인력공급부처인 직업교육·훈련부처인 교육부, 고용부 뿐만 아니라 수요부처인 산자부 재정부서인 기재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융합적이고 조직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처장관 등 기관장 인사도 일자리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가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행정부는 당장 해야 할 일과 늦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선택과 포기를 과감히 선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택된 사업도 선후 사업과 사업의 연계와 성과도출을 검토한 뒤에 디테일한 계획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를 고려한 노동시장 구성을 생각할 때 고용을 유발하는 창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창업과제는 인력공급부문에서 창업능력개발을 확보하게하고 인력수요부문에서 재정과 규제 등 창업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행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

우선 일자리 정책에 앞서서 재정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필요지출항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문

재인 행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예산 경직성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고 기술변화와 교육훈련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집행과정에서 세출예산의 경직화로 유연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인력공급 부문에서도 고용보험기금과 확보된 세출예산 집행이 문제다. 청년취업 능력, 청년창업 능력, 제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개발, 실업자 훈련, 재고용대책 문제, 취약계층취업문제 등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 등 세출예산의 집행이 공정히 되고 있는가와 교육·훈련비의 개인비리 등 누수를 어떻게 차단 할 것인가도 주요한 과제이다.

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갑을관계)에서 파생되는 양극화된 소득격차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이 약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소수의 초고소득자와 이들의 경계선 밖의 대다수 사람들은 빈곤과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용어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의 소득격차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확립과 초고소득자와 일반소득자 간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금증수로 소득분포의 격차를 해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재정의 세입예산 확보' 문제이다.

정리하며

J노믹스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대책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도 현안 과제이다. 이 모두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단기 대책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믹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 감소, 미세먼지 문제도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에는 이 성과를 발판으로 플랜트산업과 같이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래형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런 과제는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촘촘히 연계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디테일하게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협치와 공치는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